

▣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, 향후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을 결정할 전망

- 각국 정부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를 충분히 감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이 향후 몇 년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, 세계 최대배출국인 미국의 차기 대통령에 따라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.¹⁾
-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“거짓말(hoax)”이라고 일축하며, 지구온난화를 “사기(scam)”라고 주장하고,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폐지하기를 원하고 있음.
 -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,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인사를 요직에 임명하고, 미국을 파리협정에서 탈퇴시켰으며, 100여개의 환경 규정을 철회했었음.
 - 전문가들은 트럼프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, 기후·환경 정책 관련 정부 기관 권한 약화, 화석연료 생산 확대, 청정에너지 보급 지연 등을 통해 집권 1기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함.
 -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은 트럼프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복원한 기후 규정을 번복할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청(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, EPA)과 에너지부(Department of Energy, DOE)의 일부 조직 및 기능을 해체하겠다고 천명했으며, 이를 위해 일부 사무국 폐쇄, 인사이동, 요직에 트럼프 추종자 임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함.
 -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공유지 및 해역에서 모든 석유 시추를 허용하고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용이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함.
 -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‘인플레이션 감축법(Inflation Reduction Act, IRA)’에 따라 지급된 청정에너지 보조금을 환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봄.
-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기후변화는 미국이 싸워야 할 “실존하는 위협(existential threat)”이라고 칭하고, 바이든 정부의 청정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함.
 -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해리스 부통령은 청정에너지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급하고, 원거리에 위치한 풍력 및 태양광 발전설비와 주요 전력 소비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송전망을 개선할 것으로 보임.
 - 전력망 확충 및 개선이 대선 공약으로 약해보일 수 있으나, 현재 전력망으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~52% 감축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망이 미국의 기후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.
 - 이를 실행하기 위해 의회의 지지가 필요하나, 현재 공화당 의원들은 초당적 합의에 도달하려면 파이프라인 및 기타 화석연료 인프라의 조속한 건설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.
 - 현재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 캠프는 이 같은 타협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, 이로 인해 입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더욱 제한될 수 있음.
 - 입법 이외에 취할 수 있는 수단을 살펴보면, EPA가 철강, 시멘트, 정제설비 등의 산업부문

1) New York Times, 2024.10.11.

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음.

- 추가로 해리스 부통령이 중국 및 다른 경쟁 국가에 “탄소세(carbon tariff)”를 부과하도록 의회를 설득하고, 신규 LNG 수출이나 국공유지에서 석유 시추를 금지하기 위해 행정적 권한을 활용할 수 있음.